

# 2021년 2차 일자리분과 회의록

일 시	2021년 2월 10일(수) 14:00 ~ 15:00					
장 소	화상회의					
참석자 13/17 공(3/6) 민(10/11)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이진숙(공공분과장)	○	윤주연(공공)	X	서문지애	○
	장미선(민간분과장)	○	전현영(공공)	○	신민우	○
	박은혜(총무)	○	강은진	○	이정미	X
	강진슬(공공)	○	김경이	○	이채영	○
	고현정(공공)	X	김태성	○	최수정	○
	김지수(공공)	X	문동일	○		
회의주제 및 안건	<b>1. 보고 및 공유사항</b> 1) 공공분과장 및 신규위원 인사 2) 전차회의 결과 보고 3) 기관 행사 및 사업 보고 <b>2. 안건 논의</b> 1)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평가 2) 2021년 일자리분과 공동사업 세부추진내용 논의 <b>3. 기타</b> 1) 차기회의 일정					

## 회의 결과

	<b>1. 보고 및 공유사항</b> 1) 공공분과장 및 신규위원 인사 2) 전차회의 결과 보고 - 이견없음 3) 기관 행사 및 사업 보고 - 특이사항 없음  <b>2. 안건 논의</b> 1)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평가 - 평가사항 별 의견 공유 ※ 첨부1. 제4기 중간평가 의견 속기록 참조  2) 2021년 일자리분과 공동사업 세부추진내용 논의 - 2021년 일자리분과 공동사업(안) 원안대로 최종 협의 - 3월 예산교육 실시 이후 세부내용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  <b>3. 기타</b> 1) 차기회의 일정 - 2021. 3. 10.(수) 10:00 / 교육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 회의 사진



## 첨부1.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평가 - 일자리분과 의견 속기록

### ○ 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 간의 연계성이 적절한가?

- 목표에 대한 지표 잡는 것인 쉽지 않았음. 세부사업과 딱 떨어지는 지표를 찾는 것이 어려웠음. 복지일자리 확대나 공공일자리 확대 부분에서는 청년과 디딤돌사업 등이 폐지, 축소되어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함.
- 노인이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으나 최대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사업들을 담기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함.
- 누구나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대상의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세부사업 8개사업이 이 모든 부분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됨.
- 불명확한 성과지표들로 인해 상위 목표 달성과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음.
- 세부사업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센터 운영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관운영도 중요한데 그 센터의 주요사업들을 세부사업으로 넣었으면 추진 효과 및 목표의 달성정도를 확인하기 좋았을 것이라 생각됨.
- 기능별 분과의 경우 넓은 영역(ex. 여성, 노인, 청년, 중장년, 저소득층 일자리 등)을 다 포괄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해 낼 충분한 세부사업을 다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최대한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목표를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들이 수원시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수원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 영역들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됨. 보다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함. 일자리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보다 보편적 일자리를 위해서 취약계층이 아닌 대상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예전에는 장애인일자리 부분이 장애인분과에서만 다뤄졌었는데 장애청년 일자리 자료가 조사가 되어 보장계획 관련 활동들이 일자리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생각했음. 사회망 일자리에든 장애인일자리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꼭 영역별 사업이 아니더라도 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이 다양화 된다면 이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음.
- 자활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중심으로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시민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일자리에 대한 영역이 많지 않은 한계가 있음.

### ○ 초기 계획이 비교하여 폐지, 축소, 비예산 등으로 변경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상황에 따라 세부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음.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끌어 나갈 수 있었다면 보다 장기적으로 변화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었을 것임. 노동자 복지향상사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파악하는 사

업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청년채움내일공제사업의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에 하는 사업인데 관리하는 중간기관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사업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시에서 추가지원을 했던 부분임. 꼭 시에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사업에 대한 수요, 만족도 모두 높은 사업인데 시의 사정에 따라 만 2년기간에 예산을 75%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적어도 중장기 계획에 담겨 있을 때는 그 기간만큼은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임.

### ○ 계획 수립, 추진,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 모니터링을 해도 정보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거나 내용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못해 구체적이지 못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민관협력을 통해 일자리 영역의 내용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음.
- 구체적 사업명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를 잡고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임.
- 성과지표들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 취업박람회 개최횟수가 아니라 참여인원, 면접인원 등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노인일자리 담당이다 보니 노인일자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의견을 내기 어려웠음.
- 시비로만 이루어진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없음. 국도비 매칭 부분을 제외하고 논의를 하다보니 일자리 관련 영역은 핵심사업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임. 사실 국비지원사업을 논의한다는게 무의미 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의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 공식적인 보장계획 이외 보조계획(예)을 두어 반드시 지역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낸 계획에 대한 책임감과 예산 확보에 대한 사명감.
- 공공의 낮은 참여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일자리의 경우 총괄하는 시 담당부서에서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음. 일자리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고민과 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공공의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임.